

與 ‘근로시간 개편안’ 수습나서… “노동자 신뢰부터 얻을 것”

‘주 최대 69시간’ 논란

토론회 갖고 MZ세대 등 의견 수렴
노조 측 개편안 실효성 등 지적
임이자 의원 “현장 기반 정책 보완”

윤석열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을 둘러싼 ‘주 최대 69시간’ 논란 확산에 국민의힘이 직접 수습에 나섰다. MZ세대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커지자 국민의힘은 이들과 직접 만나 의견을 들었고, 해명도 했다. 당은 근로시간 개편안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는 오는 4월 17일까지 여론을 수렴, 반영할 부분은 챙길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마련한 근로시간 개편안 핵심은 ▲노동자·사용자의 ‘근로 시간’ 선택권 보장 ▲노동자 건강·휴식권 보장 ▲포괄임금제로 묶인 ‘공짜 야근’ 해소 등이었다.

하지만 근로 시간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제시된 ‘주 최대 69시간’과 관련해 과로사 문제나 연차 사용 등이 제대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반발 여론도 거세졌다.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당은 이 같은 상황에서 16일 국회에서 근로 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를 갖고, 직접 여론 수렴에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개최한 토론회에는 정부, 노동조합, 사용자, 전문가 그룹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토론회에서 근로 시간 제도

개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추진 과정이나 제도상 부작용 등을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에 대해 요구했다.

노동조합 측 인사로 참석한 유준환 새고교노동조합협의회회장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개편안 취지가 진정으로 노동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그 취지가 그대로 개편안에 반영돼 충족됐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기존 주 52시간을 넘긴 추가 근무 요구는 노동자 측 주장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노동 시간을 유연하게 선택하도록 한 개편안에 대해서도 유 의장은 “취지에 많은 노동자들이 공감할 것”이라면서도 “주 52시간을 넘어선 공짜 야근은 이를 시키는 기업의 문제이며, 연장 근로를 유연화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개편안에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단, 현행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개편안에 대한) 노동자들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했다.

사용자 측 대표로 참석한 조기현 (썬)유엔파인 대표도 “이번 개편안이 사용자 입장에서 굉장히 (근로 시간) 유연성 확보 근거를 마련하고, 노동자 대표 합의로 반영돼 지난 정부보다 진보된 제도이지만, 근로 시간과 관련 (초과 시간) 몰리지 않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청년연구단체 스페셜스페이스 대표인 유재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사업이나 기술 변화, 감염병 상황에 따라 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대처하는 대응책으로 선택권은 중요하다. 다

만 현장 노동자에게 있어 선택권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문화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논란의 시발점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것인가라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현장에서 (근로 시간) 선택권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잘 작동했는지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지 않았나”라며 “노사 자율 합의로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회사 구조 시스템이 잘 이뤄지는지 관리·감독 시스템이 명확한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근로 시간 개편안 관련 지적에 임이자 의원은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2시간 동안 서로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많이 했다. 노동계에서 특히 MZ세대가 무엇을 우려하는지 충분히 들었고, 사업하는 기업 대표에게서도 얘기를 들었고 전문가들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며 “충분히 현장 이야기 많이 듣고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野 ‘대정부투쟁’ 본격화… “쌍특검 추진, 학폭인사·굴욕외교 심판”

민주당, 정의당 접촉… 총력전 양상
처리절차·수사범위·인사추진권 이견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학교폭력-굴욕외교’라는 세 갈래 전선을 만들어 대정부투쟁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각 사안마다 지도부가 직접 나서거나 자체 조사단이나 대책위원회를 꾸려 총력을 모으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각각 특별검사(특검)안을 발의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나 이를 우회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바라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정의당과 접촉을 이어오고 있었다. 다만, 처리 절차·수사범위·인사추진권과 관련해 이견이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지난 11일 서울시청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결의문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광장 앞에서 열린 ‘강제동원 굴욕해법 강행 규탄 및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2차 범국민대회’에서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이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폭언을 하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안에 대해 “정의당에서 지속적으로 법사

위에서 논의가 우선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민주당도) 법사위에서 논의하자고 촉구했으나, 국민의힘은 협조하지 않는 모습”이라며 “정의당도 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한 설득력이 생길 것으로 보고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도 지도부를 설득하는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국가수사본부장에서 하루 만에 사임한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학교 폭력에 대해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대통령실과 검찰의 인사 검증, 학폭 재판 관련 추가 의혹을 제시하면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단장을 맡은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은 지난 8일 정 변호사의 자녀가 진학한 서울대를 방문한 데 이어, 17일 정 변호사 자녀의 학교 폭력 가해가 발생한 강원도 소재 민족사관고등학교를 찾는다. 진상조사단은 학교 측이 학폭 발생 이후 처리를 제대로 했는지 들여다 볼 예정이다. 진상조사단은 민사고에 이어 경찰청(20일), 정 변호사의 자녀가 강제전학한 반포고등학교(21일), 학교폭력 피해자 전문지원기관인 해맑음센터(22일)도 방문한다.

민주당은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대책위)를 구성해 윤석열 정부의 ‘제3자변제’를 핵심으로 한 강제징용 배상안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언행을 문제 삼고 있다. 대책위는 16일 국회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 중 강제징용 정부 배상안과 관련해 직접적이고 단선적인 표현으로 일본 비위를 맞추기에 여념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날 출범한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첫 결의문을 내고 올해 상반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바다 방출을 강행하는 일본 정부를 비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시마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제안할 것으로 알려진 후쿠시마 산수산물 규제 해제 요청을 절대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김기현 “당내 민생경제 살리기 특별위원회 만들 것”

(국민의힘 당대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현장 목소리 듣고 해결책 제시 역할”

국민의힘이 민생 관련 경제 법안 신속 처리 차원에서 당내 특별위원회 구성을 예고했다. 윤석열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한 가운데 국민의힘도 이에 발맞춰 민생 관련 현안을 챙기는 것이다.

김기현 당 대표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집권당으로서 민생 문제 해결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민생 문제 해결에 대해 국민들이 높은 기대를 걸고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민생 해결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조만간 당내 민생경제 살리기 특별위원회 구성을 할 것이라고 했다.

/최영훈 기자

김 대표는 지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협치’에 공감대가 형성된 점에 대해 언급한 뒤 “민생 관련 시급한 경제 법안은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 그것이 국회의 책무”라며 “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한 것과 관련 김 대표는 “반도체를 포함한 ICT 산업은 시간과의 싸움이자 국가 명운이 걸린 만큼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끝내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의당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본부 발족

이정미 대표 “총력을 다해 제도화 할 것”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도입 운동본부’를 발족시키며 “공공요금발 물가폭등으로 고생하는 시민들의 짐을 함께 질 3만원 프리패스, 총력을 다해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발대식에 참석해 “정의당은 단순히 버스비, 전철요금 인상 반대를 넘어 하루 평균 1000만명이 사용하는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3만원 프리패스 제도를 제안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아울러 “정의당의 3만원 프리패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6일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도입 운동본부’를 발족시키며 “공공요금발 물가폭등으로 고생하는 시민들의 짐을 함께 질 3만원 프리패스, 총력을 다해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단순한 상상이 아닌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이미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무상교통이라는 미래에, 정의당 3만원 프리패스 운동본부가 물꼬를 트겠다”고 덧붙였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